KiRi Weekly
2015.12.28 제365호

이슈
우리나라 가계부채 및 해지환급금 지급 현황과 시사점

국내 이슈
국회 계류 중인 금융개혁 관련 주요 법안 내용

글로벌 이슈
2015년 세계 재해 현황과 재난보험 증가
중국의 외국 보험회사 주요 환경 변화 및 전망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변철성 수석담당역 / 02-3775-9115)

KiRi Weekly 2015.12.28

이슈

우리나라 가계부채 및 해지환급금 지급 현황과 시사점

임태준 연구위원

요약

-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는 가계부채는 2015년 3/4분기 말 기준 1,162조 원(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81.1%)을 기록,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2014년 8월 정부의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단행된 LTV · DTI 규제 완화의 결과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년 일반대출마저 급등

- 한편, 생명보험 산업 내 보험해지(효력상실) 환급금 지급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가계부채 급등이 가계경제 악화로 이어진 결과로 진단하고 있는 상황.
  - 2015년 9월까지 지급된 보험해지 및 효력상실 환급금 누적지급총액은 13.7조 원에 달함.

- 그러나, 생명보험 산업 내 총 보유계약(=연초보유계약+신계약)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해지(효력상실) 환급금 지급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총 보유계약 대비 해지(효력상실) 환급금 비율에 변동이 거의 없고 효력상실해지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보험해지(효력상실) 환급금 지급 규모 증가의 이유를 가계부채와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으로 보임.

- 다만, 보험해지(효력상실) 시 발생하는 해지공제액 및 운영비 등의 차감에 기인한 고정비용의 존재는 보험해지(효력상실) 행위에 비분할성(lumpiness)이 있음을 함축하고 있으며, 가계부채의 현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일정 임계점을 넘어설 경우 대규모의 보험해지(효력상실)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1. 검토배경

■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 2015년 3/4분기 말 기준 1,166조 원(2015년 국내총생산 추정치인 1,437조 원의 81.1%에 해당)에 도달하였음.[1)]

- 특히, 2014년 8월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단행된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의 규제 완화 이후 급증한 주택담보대출은 거시경제의 대내적 불안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한편, 2015년 3/4분기 말 기준 누적보험해지환급금 지급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였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부진, 가계경제 악화 및 부채 급증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음.

- 생명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월간생명보험통계에 따르면, 9월까지 지급된 해지환급(효력상실환급)의 건수는 334만(105만)여 건, 지급총액은 13.7조(1.3조) 원에 달함.

■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에 따르면, 개별 가계는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소득에도 불구하고 전 생애에 걸쳐 소비의 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를 추구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저축(대출) 및 보험 상품 등을 활용함.

- 경기침체의 여파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을지라도, 개별 가계는 소비수준을 과도하게 축소시키기보다는 예금의 인출 및 대출, 혹은 보험의 해지 등을 통해 기존의 소비수준을 최대한 유지시키고자 함.

■ 최근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계부채와 보험해지(효력상실) 규모의 증대는 이론에 부합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보험의 해지 시에 초래되는 고정비용로 인하여 가계부채 규모와 보험해지(효력상실)의 건수 및 금액 간에는 비선형관계(non-linearity)가 존재할 수 있음.

- 보험계약자는 보험해지(효력상실) 시 납입보험료(혹은 납입보험료의 현재가치평가액)에서 해지공

1) 가계부채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한 주요지표로서 한국은행이 집계 · 제공하는 가계신용과 자금순환표상 개인부채 통계가 주로 사용되나, 자금순환표상 개인부채 통계는 가계부채뿐 아니라 소규모 개인기업과 민간 비영리단체 부채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고의 목적상 가계신용을 가계부채 규모의 주요지표로 사용함.

제액이나 사업비 등을 차감한 부분만을 해지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액은 보험 해지(효력상실) 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즉 고정비용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부채의 자본비용이 그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상승한다면 이론적으로는, 개별 가계의 부채 수준이 충분히 높아 부채의 추가조달비용이 보험해지 시의 고정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분을 상회할 경우 보험의 해지(효력상실)가 발생함.
  - 즉, 개별 가계수준에서 보험해지(효력상실)를 유발하는 부채의 임계점(critical point/trigger point/threshold level)이 존재하여 부채수준이 임계점을 넘어선 가구들 보험을 해약함.[2)]
- 그러므로,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경기부진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늘어났을지라도 보험 해지(효력상실) 규모가 반드시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님.

■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및 해지환급금 지급 규모의 추이를 살펴보고, 가계부채와 해지(효력상실)환급 간의 관계가 거시경제와 보험 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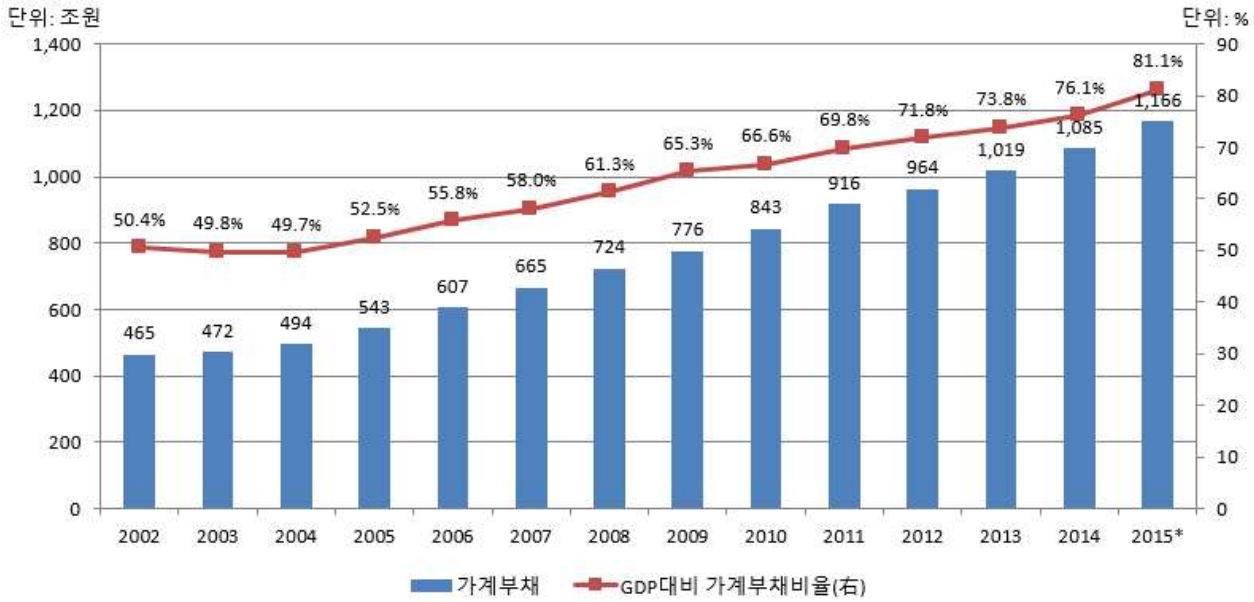
2. 가계부채 현황

■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규모는 2002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에 있으며,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15년 3/4분기 말 기준 81.1%에 달함(<그림 1> 참조).

- 2002년 465조 원에 머물던 가계부채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3/4분기 말 기준 1,166조 원에 달함.
-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살펴보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GDP 성장률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초과한 결과 50.4%에서 49.7%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2004년을 기점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압도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음.
- BIS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84%로 신흥경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뒤이어 말레이시아, 태국, 홍콩이 각 69%, 69%, 66%를 기록함.

2) 이를 줄여, 보험해지(효력상실)의 행위에는 비분할성(lumpiness)이 존재한다고 표현할 수 있음.

〈그림 1〉 가계부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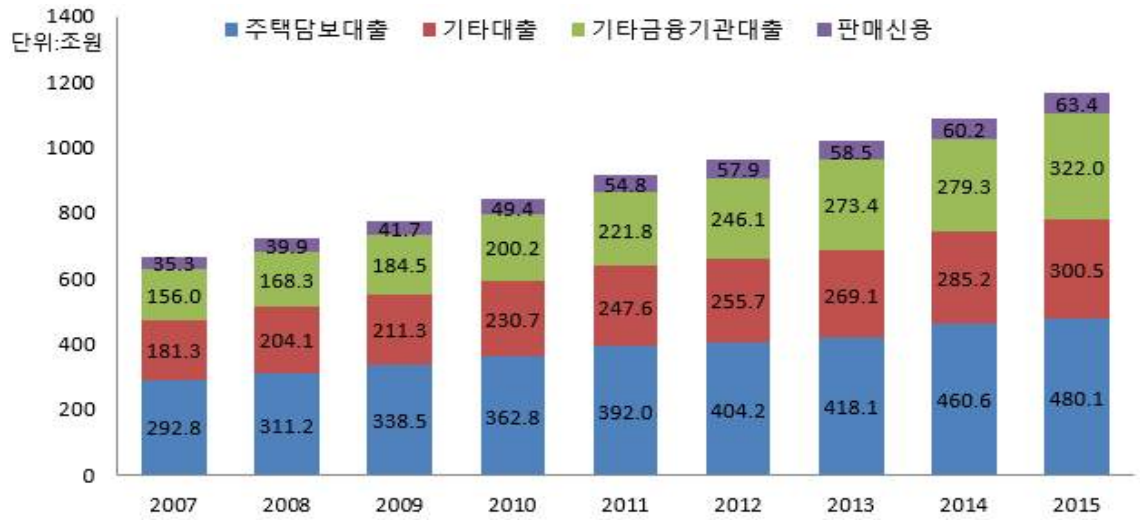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2015년의 경우 3/4분기 말 기준.

■ 2007년 이후, 가계부채를 구성하는 전 항목에서 꾸준한 증가세가 관측되었는데 특히 2014년에는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목표로 단행된 LTV · DTI 규제완화의 여파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였으며, 2015년에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다소 누그러든 반면 기타대출이 급증하여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3/4분기 말 현재 81.1%로 2014년 말 대비 5.0%p 상승함(〈그림 1, 2〉 참조).

- 가계부채규모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한국은행이 집계 · 제공하는 가계신용 데이터가 사용되었는데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의 합으로, 가계대출은 다시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로 구성됨.
- 2014년 가계신용의 전년도 대비 증가액은 66.2조 원에 달하며, 이 중 42.5조 원(64.15%)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기인하였고, 이는 정부의 LTV · DTI 규제 완화의 결과로 해석 가능함(〈그림 3〉 참조).
  - 국토교통부가 집계 · 제공하는 주택규모별 준공 실적에 따르면, 2014년 추가 공급된 주택은 총 431,339호로 전년도 대비 9.1% 증가하였음.
  - KB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2014년 주택가격지수는 전년도 대비 2.0% 상승함(2012년, 2013년 주택가격 상승률은 각 -0.2%, 0.4%에 그침.).
  - 이는 정부의 LTV · DTI 규제 완화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가 주택공급 증가를 압도한 결과로 해석됨.
- 2015년 가계신용의 전년도 대비 증가액은 80.8조 원에 달하며, 이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9.5조 원으로 전년도 대비 46.0%로 감소하였으나, 일반대출 증가는 58.0조 원(가계신용 증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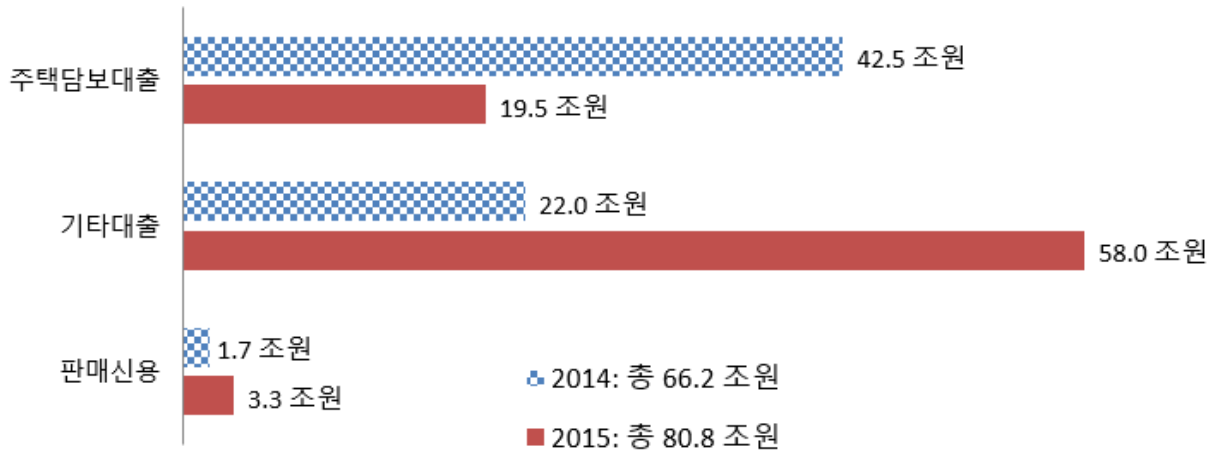
의 71.8%)으로 전년도 대비 2.6배, 판매신용 증가는 3.3조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배 늘어나는 등 가계신용 증가를 견인하였음(〈그림 3〉 참조).

〈그림 2〉 가계신용 구성요소별 추이



자료: 한국은행. 2015년의 경우 3/4분기 말 기준.

〈그림 3〉 가계신용 구성요소별 전년대비 증감액: 2014 vs. 2015



자료: 한국은행.

3. 해지 및 효력상실 환급금 지급현황

■ 생명보험 산업 내 해지환급금 지급총액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에는 18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됨(〈그림 4〉 참조).

- 반면, 효력상실 환급금 지급총액은 매년 소폭의 하락세가 관측됨.
- 2015년 3/4분기 말 기준 효력상실환급금 누적지급총액은 해지환급금 누적지급총액의 10% 미만(18조 원 vs. 1.7조 원)에 그치는 수준으로, 해지 및 효력상실 환급금 지급 규모 추이는 해지환급금 지급 규모 추이에 좌우됨.

〈그림 4〉 생명보험 해지 및 효력상실 환급금 지급현황

자료: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통계」, 2015년의 경우 3/4분기 말 자료를 바탕으로 연환산.

■ 생명보험 산업 내 보유계약이 증가함에 따라 해지 및 효력상실 관련 환급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해지환급금 절대금액의 증가를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한 가계경제 위기로 해석하는 곳은 성급한 판단으로 보임.

- 생명보험 산업 내 총 보유계약(=연초보유계약+신계약)은 2003년 1,431조 원 에서 2015년 2,676조 원(연말기준추정)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음(〈그림 5〉 참조).

〈그림 5〉 생명보험 산업 내 총 보유계약: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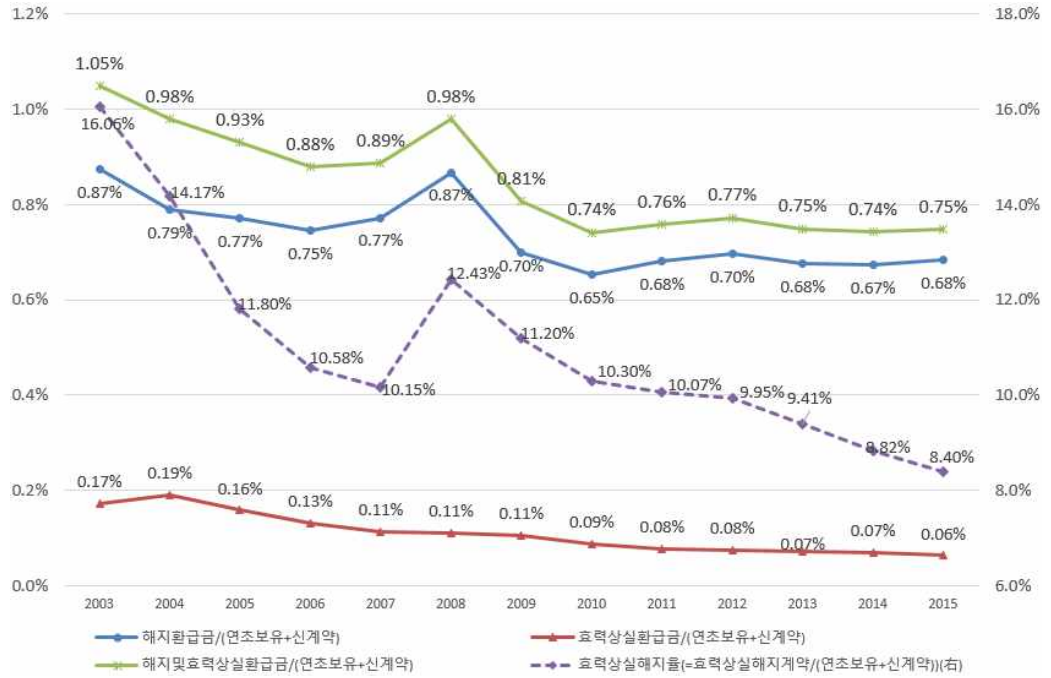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통계」.

■ 실제로, (생명보험 산업 내) 보유계약 대비 해지 및 효력상실 환급금 지급비율은 2003년 1.05%에서 매년 꾸준히 하락한 결과 2007년 0.89%를 기록하였으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0.98%로 급등하였으나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며 2010년 0.74%를 기록한 이래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임(〈그림 6〉 참조).

- (보유계약 대비) 해지 환급금 지급비율도, 해지 및 효력상실 환급금 지급비율과 마찬가지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는 꾸준한 하락세가 관측되었으며, 2010년 0.65%를 기록한 이래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임.
- (보유계약 대비) 효력상실 환급금 지급비율의 경우는, 2004년 0.19%를 기록한 이래 매년 예외 없이 하락하였으며, 2015년 0.06%(연말기준추정)로 역사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효력상실해지율(=효력상실해지계약/보유계약)의 경우도 2003년 16.06%를 기록한 이후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는 꾸준한 하락하여 2015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0.42%p 하락한 8.40%를 기록하였으며, 따라서 최근 이슈화된 해지 환급금 지급총액의 증가는 생명보험 산업 내 총 보유계약의 증가에 따른 단순 착시에 불과함(〈그림 6〉 참조).

〈그림 6〉 (생명보험 산업 내) 보유계약대비 해지(효력상실) 환급금비율 및 효력상실해지율: 연도별 추이



자료: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통계」, 2015년의 경우 3/4분기 말 자료를 바탕으로 연환산.

4. 요약 및 시사점

■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에 따르면, 생산성 충격에 의해 가계의 임금(소득)수준이 시간에 따라 변동할 때 위험회피적인 개별 가계주체는 전 생애에 거쳐 소비의 평탄화를 추구하며, 음의 충격에 대비하여 저축을 하거나 보험 상품을 구매함.

■ 부의 공급충격(negative aggregate supply shock)이 경제에 발생하면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하락하며, 이는 노동수요 감소와 실질임금 및 소득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짐.[3)]

- 이 경우 소비의 평탄화를 추구하는 개별 가계주체는 소득수준이 감소한 만큼 소비수준을 낮추기보다는 보유한 저축 혹은 대출이나 보험의 해지 등을 통해 소비의 급락을 저지하고자 함.

3) 이는 Real Business Cycle(RBC) Theory를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이 경기침체를 설명하는 메커니즘임.

- 따라서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계부채 및 보험해지(효력상실)규모 증대는 경제이론에 부합하는 상황임.

■ 다만, 일반 보통예금과 달리 보험해지(효력상실)의 경우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고정비용)이 초래되기 때문에 경기 부진 시 가계부채와 보험해지(효력상실) 규모가 반드시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님.

- 일반 보통예금의 경우 예금의 인출 시 발생하는 비용이 없거나 매우 낮은 반면, 보험해지(효력상실)의 경우 총 납입보험료(혹은 총 납입보험료의 현재가치평가액)에서 해지공제액이나 운영비 등을 차감하고 남은 부분만을 환급금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손실(고정비용)이 초래됨.
- 따라서, 보험해지(효력상실)의 행위에는 비분할성(lumpiness/indivisibility)이 존재함.
- 즉, 개별 가계수준에서 부채가 일정 임계점(critical point/threshold level)을 넘어서면서 추가로 부담해야할 이자비용(대출비용)이 보험해지(효력상실) 시 발생하는 고정비용을 상회할 때 비로소 보험해지 및 효력상실이 발생함.

■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가계부채와 보험해지(효력상실)의 절대규모 자체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GDP 대비 급증하는 가계부채비율과는 달리 (생명보험 산업 내) 보유계약대비 보험해지(효력상실) 환급금 지급비율에는 변동이 없고 효력상실해지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가계 경제 악화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에서 보험해지(효력상실) 환급금 지급 규모 증가의 원인을 찾는 것은 성급한 판단으로 보임.

■ 하지만,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비율은 여전히 한국경제 및 보험산업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다수의 가계 주체들의 부채 수준이 보험해지(효력상실)를 위한 임계점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이 경우 대규모의 보험해지 및 효력상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 2015년 이전까지의 가계부채 증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 근거한 부동산 투자과열 및 정부의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의 결과 급증한 주택담보대출에서 기인함.
- 반면, 2015년 증가한 가계신용 81조 원 중 71.8%에 달하는 58조 원이 일반가계대출(非주택담보대출)의 증대에 기인하였음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는 대규모 보험해지 및 효력상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경고 신호로 해석될 수 있음. KiRi